

민주 '세대결' 앞두고 계파별 전열정비

11월 전대 당권경쟁·총선 대비 세력화 박차

쇄신연대 2기 출범·진보개혁모임 등 가시화

민주당 내 각 계파들이 오는 11월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전열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파들이 몸풀기에 나선 것으로 전당대회 당권 경쟁은 물론 내년 총·대선 국면을 앞두고 본격적인 세 대결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당내 비주류 연합체인 쇄신연대는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민주희망 2012'란 이름으로 2기 출범식을 갖는다. 정영천·천정배·박주선 최고위원 등이 속해 있는 쇄신연대는 지난해 7월 10·3 전당대회에 앞서 정세균 당

시 당 대표로 대변했던 당권파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모임이다. 쇄신연대는 김영진·천정배·문학진 의원을 2기 공동대표로 선임했으며 각계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당 정책과 비전 제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애초 쇄신연대 일각에선 해체론도 제기됐으나 지난 5월 3일 집행부 모임을 갖고 '존재' 쪽으로 기각을 잡았다. 당 개혁이라는 첨입 목록은 지난 전당대회 등을 통해 일정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야권 통합 등 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해체가 아닌 일종의 '리모델'

링'을 선택한 셈이다.

이에 대해 쇄신연대 측은 "당 개혁 등 창립 목적이 달성된 측면이 있고 또 까파 잘못하면 하나의 계파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다만 야권 통합 등의 이슈에서 당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듣는 등 역할을 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2기 출범의 의의를 밝혔다. 하지만, 당내에선 차기 당권·대권 경쟁을 앞두고 비주류의 세력화를 염두에 둔 차원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86과 친노, 재야파의 연대체로, 당내 최대 조직인 '진보개혁모임'도 지난달 30일 낮 오찬 모임을 열어 당 개혁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기 총선 공천 및 대선 후보 선출 '규정'에 대한 자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진보개혁 모임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김근태

전 의원, 문희상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 출신 모임인 청정회 소속 민주당 인사들은 3일 비공개 모임을 갖고 모임 확대 개편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5월 23일)를 계기로 친노 진영 안팎에서 '친노'의 의미를 '관계의 친노'에서 '가치의 친노'로 넓혀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청정회의 문호를 비(非) 청와대 출신에까지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개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날 "차기 당권 레이스 국면이 본격화되면 계파별 세 계집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계파별 숨고르기는 이미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선5기 지방자치 1년 평가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쪽부터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진표 원내대표, 손학규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원혜영 충북지방정부위원장.

/연합뉴스

민주 '도청의혹' 한선교 고발…점거농성 해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비공개회의 '도청 의혹'과 관련,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혐의로 하는 등 여당에 과상 공격을 펴부었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수신료 인상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사흘째 이어온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 통신위 점거농성을 해제했다.

일본 방문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하자마자 문방위 회의장을 방문, 밤샘농성 중인 의원들을 격려했던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한나라당

이) 순리에 어긋나려 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나라당을 거론했다.

문방위원인 전병현 의원은 "한나라당이 자신들은 절대 찬성하고 민주당과 시민들은 절대 반대하는 구도를 만들어 KBS와 민주당, KBS와 국민간에 대립·갈등을 부추기고 이를 즐기고 있다"고 가세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진행된 비공개회의 녹취록을 문방위 회의에서 공개한 한선

교 의원을 통신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당 '불법도청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한 의원이 민주당이 시한으로 제시한 24시간이 지난도록 (녹취록 입수 경위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BS는 공식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이른바 도청 행위를 한 적은 없다"며 "회사와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과 행위에 대해 즉각 법적 대응에 착수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라공인중개사

펜션텔 매도

전북순창군 복흥면 대방리 펜션텔 2007년 준공

- 대 지 : 10980㎡, 임야 : 13937㎡
- 케모미일 23평형 37개동, 케모미일 10평형 17개동 관리동, 각각 독채형식 주차장임비·수리환경·수리원·기도원적합 여유대지임을 계획있음
- 매매가 : 13억(근저당2억9천포함) • 실투자금 : 11억1천

모텔매도

전라남도 여수시 율산면 월산리 · 대지 : 1038㎡, 건물1059㎡

- 지하1층지상4층 객실 : 294실 월세비내리터 이용 율율선단입구 2012 여수세계박람회 속박업 지정업체
- 매매가 : 10억(근저당3억6천대출승계가능) • 실투자금 : 6억4천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문수동 한국아름리움후문부근 코너

- 대 지 : 262㎡ 저2층일반주거지역 월률·빌라·점포형주택 적합
- 매매가 : 1억5천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북광주IC 부근 생산녹지

- 대지 : 1425㎡ 투자적합 도로있음 영산강변 경치좋음
- 매매가 : 2억2천5백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일동초교부근

- 대지 : 210㎡ 저2층일반주거지역 코너 월률·빌라 적합
- 매매가 : 1억3천만

과수원매매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신전리

- 전·답 : 9150㎡ 계획관리지역 배나무 15~20년생 2000주이상 지대가 높아 과일당도 아주 좋음
- 매매가 : 1억3천5백만

토지매매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 공장용지및집증지 : 8480㎡ 공장부지 : 3192㎡ 외 집증지 담양옥방면면자선 도로접 4차선도로 계획있음
- 매매가 : 6억4천만

대표전화 ☎ 511-6633
핸드폰 : 010-6522-7731 FAX : 512-4589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려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훈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앞,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매매

- ▶ 산월IC 교통광장 접 코너
- ▶ 면적: 700평, 1350평 분할기 광고효과 최고!!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화순 북면 수련원·요양원·기독원 부지 매매

- ▶ 임야: 47000평, 단층건물: 250평 (5동)
- ▶ 단지내 도로개설됨 소나무, 산악초 재배단지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복구 신안동 토지매매(상업지역)

- ▶ 대 지 : 250평(30×8코너)
- ▶ 가로32m, 세로26m (분할가능)
- ▶ 금 매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복구 동립동 공장(창고)급매

- ▶ 대 지 : 538평, 680평, 1000평
- ▶ 건 물 : 300평, 200평, 200평
- ▶ 높 이 : 8.9, 10.9m
- ▶ 호이스트 : 유, 유, 유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문의: 016-644-4265, FAX.523-8558

한 '경선률' 재의결 전국위 격돌 조짐

전국상임위 '선거인단 21만명 투표70%+여론조사 30%' 의결

한나라당이 지난 30일 7·4 전당대회 '경선 룰(rule)'과 관련한 당헌 개정안 제의결 절차에 들어갔지만 일부 전국위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2일 열리는 전국위에서 전당대회 규정을 둘러싸고 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전날 밤 정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당권주자 7명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현재 규정대로 전대를 치르자"고 합의했다.

당 지도부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상임전국위를 열고 '선거인단 21만여명 투표 70%+여론조사 30%'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제4차례 전국위원회 40명 중 35명 찬성,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이같이 결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회의가 열리자마자 상임전국위원 1명이 당헌 개정안의 결의를 거부하는 경우 다음달 2일 전국위에서 일어날 불상사에 대한 모든 책임이 현지

도부에 있음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헌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던 김혜진 전국위원도 "전대를 다시 논의해야 하며 전당대회도 연기해야 한다"면서 당헌 개정 강행 시 법적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친이(친이명박)가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전대를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 글 통해 "법적 절차를 보완해 뺨질하겠다는 것은 당 지도부의 면피 용으로, 전국위원들이 지도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전국위에서 당헌을 개정하려면 당 전국위원 741명의 과반 참석(371명 이상)이 필요한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당 지도부는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감안, 7·4 전대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등록금 교직원 연금 전용 금지"

한 "이공계 전공 학생 등록금 우대를"

여야의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책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변재일 의원)는 대학등록금을 교직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으로 전용하는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은 이공계와 기초학문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30일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이공계와 기초학문 분야의 명목등록금을 다른 전공에 비해 더 낮추거나 국가장학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의 우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8월 국회 소집 사실상 합의

강용석 의원직 제명 처리 무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는 8월1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두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8월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한 달 동안 시급한 민생안과 결산 및 18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9월 정기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등록금 인하 및 대학 구조 조정을 위한 관련 법안들은 7월 중에 국회 교